

정책연구 평가 결과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주요 선진국 장애인정책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	연구기관/ 책임연구원	한국보건사회연구원 / 김성희
부서/과제담당관	장애인정책과/ 정충현	담당공무원	최기전
연구 방식	1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위탁형 용역	2.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연구형 용역	3.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문형 용역
연구자 선정방법	1.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경쟁계약	2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의계약	
연구 기간	2012.10.15 ~ 2012.12.5 (50일)		
연구 결과	<p>□ 단기적 개선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마련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동지원이나 장애인연금과 같은 제도는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수적이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주요한 서비스들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경우 꼭 필요한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으므로,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마련 방안이 필요함. <p>□ 장기적 개선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장애등급 별 접근 방안이 아닌 장애인의 의료/장애 상태, 근로능력파악, 경제적 상황, 가족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애인 판정기준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. ○ ICF(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, Disability, Health)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CF의 장애 평가기준으로의 도입은 종합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과정이 필요함. - 종합적인 장애인정책체제로 ICF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ICF 활용은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파악을 용이하게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임. • 장애인복지현장에서 ICF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,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		

		<p>기 위한 사례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.</p> <p>○ 종합적인 판정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시 되며, 이를 위한 자문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.</p>		
평가 결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선진국의 장애판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등록제도의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함 • 추진방법의 적절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헌분석, 전문가 FGI 및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층 논의로 적절한 연구가 시행됨 •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 내용대로 이행 •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없음 •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등록제도 개선시 부분적 활용 • 기타사항 		
평가자 확인	구분	평가전문위원		과제담당관
	성명	소속·직위·성명 충북대학교 교수 윤상용		소속·직위·성명 장애인정책과 과장 정충현
평가 보고회	개최일자	2012.12.10		장소 복지부
	참석자	소속·직위·성명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최기전, 주무관 김지영		